빛 발하는 전남 친환경농업

전국 '안전 먹거리' 절반은 전남산

유기·무농약 인증 전국 비중 50.6%

생산기반 선점…경제효과 2조6천억

■2010년 전국 시도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단위: 호, ha)

구분	합계 농가수	합계 면적	유기농 면적	무농약 면적	저농약 면적	전국인증 면적대비(%)	비고 (순위)
계	183918	194006	15518	94533	83955	100	
서울	102	39	0	30	9	0.0	14
부산	446	336	2	156	178	0.2	10
대구	764	587	97	100	390	0.3	6
인천	1012	1105	166	773	167	0.6	9
광주	485	343	6	116	220	0.2	15
대전	137	72	4	6	62	0.0	16
울산	769	677	57	128	492	0.3	8
경기	7707	7653	1972	2813	2868	3.9	13
강원	6232	15132	1626	12019	1477	7.8	2
충북	5868	5280	870	2114	2297	2.7	11
충남	9517	15513	1655	2268	11590	8.0	5
전북	11402	12284	1631	5171	5483	6.3	7
전남	97460	98112	3323	59731	35058	50.6	1
경북	25648	22327	1807	4678	15841	11.5	3
경남	15062	12043	981	3483	7580	6.2	4
제주	1307	2502	1310	947	245	1.3	12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의회에 상정된 '충남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모두 10명의 의원들 중 반대는 6명, 찬성은 4명이었다. 이 위원회는 충남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었다.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음에도, 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뭘까.

친환경 농업인 출신으로 특위 구성안 부결을 주도한 김용필(자유선진당) 의원은 "도내에 친환경 무상급식 생산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생산기반이 구축된 전남, 경기지역의 농산물이 도내로 유입돼 지역 농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1번지'=전남이 친환경 농업을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제 1차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면서부터다. 심각한 고령화에 세계 시장 개방으로 농업 경쟁력도 열악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대로는'버려진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컸기 때문이다. '생명산업'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도 이 시기다.

전남도는 '녹색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에 총력을 쏟았다. 인력도 없는데다, 고령화까지 겹친 탓에 머뭇거리는 농민들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적극 독려했다.

결국 지난 2009년 당시 전남 경지면적(30만9803ha)의 33.8%인 10만4682ha를 친환경 농업으로 바꿨고, 지난해에는 경지면적(30만7261ha)의 31.9%인 9만8112ha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유기농 재배면적 3323ha ▲무농약 재배면적 5만9731ha ▲저농약 3만5058ha 등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전국 인증면적(19만4006ha)의 50.6%에 달했다. 지난 2004년 경지면적의 1.3%(4057ha)에 불과했던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이 무려 25배 이상 뛴 것이다.

시·도별로도 ▲강원(2위·1만5132ha) ▲경북(3위·2만2327ha) ▲경남(4위·1만2043ha) 등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구례의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이 경지면적(5575ha) 대비 3758ha로, 67.4%에 달했다. 담양은 경지면적(9939ha)의 54.2%인 5386ha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유기농과 무농약의 비율이 상승하는 등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남보다 앞선 생산 기반을 구축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에 전남 지역 농산물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만 2조60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서울·수도권 등 800개 초·중·고에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1만개소에 전남산 쌀을 공급,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세계 최고 유기농업 중심지'로=전남은 지난해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단계 도약을 추진중이다. 이른바 '세계 최고의 유기농업 중심지'가 목표다.

저농약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경지면적의 1% 수준에 불과했던 유기농 비율을 15%까지 늘려 매년 40% 이상 커지고 있는 세계 유기농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당장, 첫 해인 지난해 유기농 인증 면적이 2009년(2745ha)에 견줘 578ha 증가, 3323ha에 달했다. 무농약 재배면적도 4만15ha에서 5만9731ha로 늘었다. 전남도는 또 농업의 규모화·기업화도 추진하면서 유통·가공산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해 농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생명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물 복지' 강화 가축질병 예방한다

김효석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민주, 살처분 보상비 세금 감면 추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3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도입,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복지축산 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 기준 강화 ▲일정 규모이상의 축산업 및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 제공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기준 및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조항 위반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3조원이 넘는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인명손실, 340여만 마리에 이르는 소와 돼지의 살처분 등 이번의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동물 사육과 운송·도축 등 모든 과정에 복지 개념을 도입, 축산환경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구제역 초기대응 실패 사과·책임 추궁

국회 행정안전위…환노위 "부실 매몰로 침출수 유출" 질타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면서 '국가적 재앙'으로 확산한 구제역 방역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히 현 정부의 구제역 대책과 김대중 정부의 구제역 대책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정권 10년 동안 구제역이 2번 발생했고 피해액이 각각 3000억과, 1400억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3조원으로 추정된다"며 "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면 국민적인 대란을 겪고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국민의 정부 때는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해서 살처분 가축이 2천200마리에 불과했다"며 "현 정부는 구제역 발생 이후 40일이 지나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군부대는 2개월 지나 투입됐다. 이는 초동대응을 잘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고, 행안부의 범정부적인 총력대응도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대책 추궁과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직전까지 구제역과 관련된 환경부의 관리지침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이 서로 달랐다"며 "특히 농식품부 행동지침에는 매몰지 선정시 하천·지하수와의 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부실 매몰로 인한 침출수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을 깔지 않고 구제역 가축을 매몰하는 모습과 지하수로 보이는 물이 고인 채로 가축을 매몰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3장을 공개한 뒤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3일 환경노동위에서 경기도 내 매몰 현장 사진 중 돼지 발목까지 물이 고여 있는데도 매몰하고 있는 사진(위)과 비닐을 깔지 않은 상태로 돼지를 매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홍영표 의원실 제공〉

광주, 초유의 '대물 변제' 입찰

도시공사, 진곡산단 조성 자금난 따라

광주도시공사가 진곡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조성된 용지를 사업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광주도시공사는 3일 "광주시 광산구 진곡·고룡·오선·하남동 일원 191만1000㎡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724억8857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조성완료된 부지를 대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말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사업비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역 최초 사례다. 최근 공사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채승인을 강화하면서 '대물 변제 입찰'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광주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연구개발특구에 진곡산단이 포함돼 있는데다 지역 내 공장용지가 크게 부족해 진곡산단 개발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대물 지급 조건이지만, 시공사로 참여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은 시급히 추진돼야 하나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대물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불 방식만 다를 뿐 나머지는 예전의 사업과 똑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